

김포, 서울시로 편입 “시민이 원해”... 與 ‘총선용’ 해석 경계

의원입법 형태로 편입 절차 방침
광명·구리·하남 등 ‘서울 광역권’
與 “지역민 등 요구 있을 때 검토”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이 31일 광명·구리·하남 등을 편입하는 ‘서울 광역권’ 문제에 대해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포 서울 편입이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전략이라는 해석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에 대해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는 김포시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포시장을 비롯한 김포에서 공적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서울 편입 주장을 했다”면서 “당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한 결과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입법 형태로 편입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시작 단계다. 법안이 발의되면 정상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사무총장, 윤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뉴시스

인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안다. 아무래도 의원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전날 경기 김포시 고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진행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당론을 전하면서 “(김포

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계 하고 있는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하려 한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다.

특히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포시뿐 아니라 서울과 생활권이 겹치는 광명·구리·하남 등 서울 주변 경기도 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고

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여당의 행보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 ‘수도권 위기론’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이란 해석이 나왔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포시 서울 편입 당론 추진이 ‘총선용’으로 비춰지는 데 조심스러워 하는 기색이다.

윤 원내대표도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현재 단계에서는 김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나머지 지역은 지역민들이나 지역의 요구가 있을 때 검토할 생각이다. 지역민들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해 “서울 주변 도시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길”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에서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김포시 지역 주민의 염원’이라는 데 방침을 찍고 있다. 주민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으며, 총선을 앞뒀다고 해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나

는 입장이다.

게다가 경기도가 경기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를 추진하면서 김포시에서는 ‘경기북도보다는 서울시가 낫다’는 여론이 나온 것도 당론 추진의 이유로 보인다.

김포시는 경기북부 도시와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으며, 남부 도시는 인천에 막혀 인접해있지 않다. 이에 ‘김포시는 섬이냐’는 지적이 나왔고, ‘서울로 편입해 교통난 등을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 역시 총선 전략이라는 해석에 대해 “지역민들 숙원을 당에서 선제적으로 챙기겠다는 것”이라며 “선거용 전략이라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전국적인 요구사항들을 정부(여당) 입장에서 응답하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교통 문제 해결을 선행하지 않고 도시 통합을 언급했다는 비판에는 “편입과 교통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해야 한다”며 “교통망 문제는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고, 서울 편입도 지역에서 분출된 것이라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고금리에 서울 아파트 거래 급감 매매물건 쌓여 시장 ‘숨고르기’

9월거래량 3358건... 전월비 12.8%↓
10월 매매량 7.8만건 ‘역대 최다’ 기록
매수자들 관망세에 부동산 시장 ‘주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급감으로 집을 내놓은 물건이 쌓이고 있다. 최근 고금리 지속과 정부의 대출 조이기 등이 아파트 매매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수자들의 관망세로 매매 물건이 쌓여 부동산 시장의 ‘숨고르기’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3358건으로, 전월(3849건) 대비 12.8%(491건) 감소했다. 9월 아파트 매매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가 1091건인 점을 감안할 때 내립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1063건) 이후 계속 1000건을 밑돌았다. 올해 1월(1411건) 네 자릿수로 반등했고, 지난 4월(3186건)부터 3000건 이상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다.

권역별로는 노원구와 송파구가 257건을 기록하면서 지난달 가장 많은 아파트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강남구(195건), 강서구(180건), 강동구(180건), 성동구(178건), 영등포구(176건), 양천구(175건), 성동구(168건), 구로구(143건), 서대문구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뉴시스

(141건)가 뒤를 이었다. 중저가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단지과 정주 여건이 양호한 강남권 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양분됐다.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인 거래량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아파트 매매물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날 기준)은 7만8406건으로 집계되면서 2020년 10월 집계 이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1일 매매량(7만2154건)과 비교하면 약 1개월 만에 8.7%(6252건) 증가했다. 연초 매매량(5만513건)과 비교하면 55.2%(2만7893건)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면서 선택 매수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희망가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거래가 끊기고 매매물이 쌓이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여파가 이어지면 서 내년 초까지 집값 조정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 힘겨루기로 시장이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 속도 조절, 금리 상승, 급매물 소진, 역전세난 등으로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상승 기대심리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소강국면 속에 매도자와 매수자 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환 기자 kdh@

1~9월 국세수입, 전년대비 50조 감소

기업실적 부진에 법인세 20% 줄어

올해 1~9월 국세(稅)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 원 넘게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 영업이익 부진 속에 법인세 수입이 20% 이상 줄고,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 수입도 15% 가까이 감소한 영향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조6000억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50조9000억 원(-16.0%) 줄었다.

세목별로, 소득세(84조6000억 원)가 1년 전보다 14조2000억 원(-14.4%) 감소했다. 지난해 11월~올해 7월 주택매매량이 18.9%, 순수 토지 매매량 역시 34.6% 각각 감소했다. 이 결과 정부의 양도소득세 수입이 줄어들었다.

법인세(71조9000억 원)는 전년보다 23조8000억 원(-24.9%) 덜 걷혔다. 기업 실적 부진과 8월 중간예납 납부세액 감소 등이 반영됐다.

부가가치세(54조9000억 원)는 수입 감소 및 세정지원 기저효과 탓에 6조2000억 원(-10.2%) 줄었다. 1~9월 수입액이 지난해 대비 12.6% 줄면서 관세(5조4000억 원)가 2조8000억 원(-34.6%) 덜 걷혔다. 또 상속증여세(11조1000억 원)가 7.3% 감소했고, 증권거래세(4조9000억 원)가 5.8% 줄었다. 이 밖에 유류세 인하 연장 등으로 교통세(8조2000억 원) 수입이 5.6% 줄었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10조2000억 원)를 고려하면 실질적 세수입은 40조7000억 원 줄어든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캠코 ‘새출발기금’ 예산 집행률 9.2%

예산 15조 중 1조3912억만 집행
전체 신청액 4조6220억에 불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집행률이 10개월(지난해 10월~올해 8월)간 전체 예산(15조원)의 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월까지의 약정 완수율은 56.3%를 넘기면서, 낮은 예산 집행률이 새출발기금의 과도한 심사 기준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새출발기금의 낮은 예산 집행률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

정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이 신청된 전체 채무액은 시행 직후 10개월간 4조6220억원에 그쳐 시행 1년차 예산인 15조원 대비 31%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금액 중 8월까지 채무조정이 인가된 금액은 1조3912억 원(29.8%)이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3만5803명이었으며, 동기간 채무조정이 인가된 인원은 2만167명으로 신청자 중 56.3%가 해당 기간 내에 채무조정을 마쳤다.

/안승진 기자 asj1231@